

# 여야, 개헌 평행선... “빨리 논의” vs “권력분산”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삼일위원회를 가동

**우원식 “국회가 결론 못내 대통령이 발의”**  
**김성태 “발의 늦춘 것 무의미...파쇼 방식”**  
**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청산해야”**

해 성폭력 대책법안이나 민생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만 달렸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먼저 “국회의 개헌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정치권의 약속을 바꾸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그 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다.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

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

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잠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여부 “민주 경선이후 결정”



민주평화당박지원 의원은 19일 6·13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풍’이 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4명이 경선을 한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제가 부영이는 낮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고 해가 지면 사냥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때를 좀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 “서구 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 특별교부세 확보”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천정배 의원(광주 서울)은 ‘서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광주 서구 풍암 생활체육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지난달부터 광주시청·서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안부에 일 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을 요청했고,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천 의원은 “커뮤니티센터가 조속히 건립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만남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여수찾은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9일 낮 전남 여수시 서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영장 청구된 MB 어떤 혐의 만나

### 350억대 비자금 횡령·직권남용 등 18개 안팎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전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법정싸움’에 돌입한다.

법원에서 열릴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향후 전개될 법정싸움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다.

이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뇌물은 크게 17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 대신 내준 약 60억원의 소송비, 2007년 대선 즈음부

터 2011년까지 민간영역을 통해 받은 약 35억5,000만원 등 세 덩어리로 나뉜다.

이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수액이 가장 큰 뇌물 혐의는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고 이 소송비도 이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권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각종 경영비리 혐의에도 연루됐다고 의심한다.

우선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여기에 이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든 정황도 포착했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의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대어해준 배임, 탈세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99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배경에도 이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수도’ 명문화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첫날인 20일 헌법 전문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의 핵심 개정사항은 헌법전문에 5·18 등 4·19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두 번째로 발표될 ‘지방분권·국민주권’과 관련한 개헌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조항 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자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나, 인정 범위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날 공개하는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됐다. 문 대통령 역시 평소 4년 연임제를 소신으로 피력해왔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형태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자문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했다.

먼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문위원들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조정했다.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안이 함께 보고됐으며, 장관 임명방식도 복수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그랜드오픈 기념**

아직도 모르세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주문은 물론 배달설치까지 One-stop 제공!

# LED TV 광주·전남 총판

전국최저가 200대 한정 판매

55인치	⇒	44만원
32인치	⇒	16만원

(배달설치비 별도)

기업체, 관공서, 학교, 호텔, 병원, 원룸 개인 구매 환영

광주·전남 가맹점 / 대리점 모집

특정행사

대표 주문번호 1588-3089

A/S 062) 365-3600

흑석·하남점 010-3326-5606

월산점 062) 365-3100